

노동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pp.63-91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0.20.4.003>

연구논문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주연*
김재호**

본 연구는 국내 소비부진과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원인을 한국노동패널 7~21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고용형태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평균소비성향의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1년을 기준으로 이전 7년(2004~10년)과 최근 7년(2011~17년)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소비지출을 소득변동효과와 소비성향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모든 가구에서 가계의 소비부진에는 소득변동에 의한 효과보다 소비성향변동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이전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소비성향의 하락이 가계소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었다.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첫째, 가구주의 인구학적 변수들은 전체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에서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가구소득 및 임금 변수는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값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자산 및 부채 변수는 전체 가구에서는 추정계수가 양(+)의 값으로 자산에 대한 부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 변수는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값, 자산 중 금융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부동산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금융자산 추정계수가 음(-)의 값이 크게 나타나면서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더

논문접수일: 2020년 9월 1일, 심사의뢰일: 2020년 9월 16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2일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juyeonjeong@naver.com)

** (교신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ksud71@kli.re.kr)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가계부채는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통계적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의 부족한 부분을 부채의 차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구주의 고용형태 더미변수는 양(+)의 값을 보이며, 임금이 증가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며 소비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고용형태 변수는 이전에 비해 최근에 더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가계소비, 평균소비성향, 임금근로자, 고용형태

I. 서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8~10%의 경제성장률로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2000년대 초 그나마 5%를 유지하던 성장률이 최근에는 2%의 성장률로 하락하면서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가계의 소비활동이 2%대 성장에 머물면서 민간소비 위축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을 확대시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9년 8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 9천 명)중 7,481천

1) 장지연·이병희(2013), 남재량(2007), Forster(2015)의 연구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대체로 낮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한 가지로 비정규직의 확대를 들고 있다.

명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13,078천 명(63.6%)이다.²⁾³⁾ OECD 국가들의 비정규직이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가 300만 명(1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176.9천 원에서 2019년 316.5천 원으로 139.6천 원(78.9%)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동기간 57.6천 원이 증가하면서 5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4년 65.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54.7%까지 하락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평균 55% 정도 수준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⁴⁾ 이처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근로소득 수준이 낮고 과거보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비정규직 가계의 현재와 미래소득이 불확실해지면서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한 연구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안주엽·정성미, 2012; 김태홍, 2013), 비정규직의 활용방식(권순식, 2013), 비정규직의 교육훈련(강순희·안준기, 2013),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최효미, 2014)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소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 역시 최근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을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득분배 구조 악화, 고령화 추세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이 가계의 소비

2) 통계청 보도자료(2019. 10. 2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p.1.
 3) 본 연구의 분석기간 중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4년 37.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 32.2%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4년 5,407천 명이었던 비정규직의 규모는 2019년 7,481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여력을 감소시켜 가게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부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동시장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가 가게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게의 소비증가율을 소득변동효과와 소비성향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소비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고,⁶⁾ 또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게의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소비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소비지출을 소득변동효과와 소비성향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어떤 요인이 소비하락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II. 선행연구

가계소비와 관련된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이 항상소득가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Modigliani and Brumberg, 1954; Friedman, 1957; Hall, 1978), 이는 소비가 현재의 소득수준보다 항상소득(미래에 기대되는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가계의 경우 항상소득에 기초하여 각 기별 소비를 평탄화(smoothing)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소득

5) 나승호 외(2013), 임병인 외(2014), 정세은(2017), 최정수·박소현(2004), 배성종·이상호(2006), 김군수 외(2013), 권규호·오지윤(2014), 김석기(2015), 박기백(2017) 등의 연구가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 참고.

6) 주원·김천구(2017. 10. 27), 「소비 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평균소비성향 복원이 소비 개선의 핵심」은 소득수준별, 연령별로 소비지출을 소득변동효과와 평균소비성향 효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원·김천구(2017) 연구의 소비지출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소비지출을 분해하였다.

의 증가 효과는 소비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일시적 소득의 감소는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소비이론을 전제로 최근 가계소비 하락현상의 원인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가세 둔화 및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하락하고 있음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소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 몇 가지 원인들 중 가계소득의 증가세 둔화 그리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는 가계가 소비를 하기 위해 벌어들이는 가처분소득과 관련된 원인이다. 나승호 외(2013), 임병인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득증가세 둔화나 계층 간의 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소비의 탄력성으로부터 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을 연구한 정세은(2017)은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변화가 없는데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두 계층 간의 괴리가 커지고 이로 인해 계층 간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로 인해 근로자 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전후로 우리나라의 소득과 소비부진에 관한 연구에는 최정수·박소현(2004), 최규권(2005), 변양규(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최정수·박소현(2004)은 2000년대 초반 민간소비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고용부진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축소, 신용카드 대출 등 가계부실의 악화 그리고 고소득층의 가계대출이 소비보다는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가계의 유동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규권(2005)의 연구에서는 소비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기업의 소득증가

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즉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가계소득의 증가는 거의 없는데 비해 기업소득은 연평균 6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소비부진에 대한 원인을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부진과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 변양규(2015)는 근로자의 임금증가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더라도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에 의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의 소비성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우리 경제의 소비부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임금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1. 분석 자료 및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이하 KLIPS)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KLIPS의 가구데이터에서 소득과 소비 및 저축과 관련된 변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는 2차(1999년 기준)부터 조사되었는데, 이들 변수는 소득이나 소비와 다르게 해당연도의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시계열적 일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 자료는 4차~20차 자료(2004~16년 조사연도 기준 자료)를 그리고 소득 및 소비 자료는 5차~21차(2005~17년 전년도 기준 자료)를 사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 구성 및 설명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소비지출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통신비, 피복비, 대중교통비, 생필품구입비 포함
가계연간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으로 자영업자의 소득도 포함
금융소득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주식, 채권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준 것,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 정부보조금, 근로장려세제,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 기타
기타소득	보험금(손해, 저축성, 종신), 퇴직금, 증여/상속, 축의금, 조의금, 당첨상금, 재해보상금, 기타
가계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가계총부채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갚돈 등
원리금 상환액	부채의 원리금과 이자의 합
가구주 연령	연령
가구주 성별	남성=0, 여성=1
가구원 수	총 가구원수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 수도권 외=0
가구주 학력	교육년수로 환산(미취학,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2년제=14, 4년제=16, 대학원 석사=18, 대학원박사=21)
연도 더미	2004~10년=0, 2011~17년=1
연평균 임금	월평균임금×12
근로유형	정규직=0, 비정규직=1

용하여 최종적으로 14년간(2004~17년)의 시차를 동일연도 기준으로 구축한 매칭자료(matching data)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평균소비성향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2011년을 기준으로 이전 7년과 최근 7년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 학력, 성별의 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고용형태와 관련된 변수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데이터와 개인데이터를 매칭하여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하며,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고 소득과 소비 항목에 모두 응답한 가구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가구는 자산 및 부채 항목에 대해 최소한 한 개 이상 응답한 가구를 최종 패널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계소득, 소비 및 자산, 부채 등의 명목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⁷⁾를 반영하여 2015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들의 자세한 설명은 <표 1>로 정리하였다.

2.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전체 가구(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활 포함)와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며 그중 임금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따른 가구 특성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 가구주 성별은 2004년 84%였던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2010년까지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는 76%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가구주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전체 가구 중 24%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9.85세에서 55.88세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주의 교육년수는 2004년 10.88년에서 2017년 11.63년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거주지역 역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7)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기준=100) 1998년 64.6, 1999년 65.1, 2000년 86.6, 2001년 69.3, 2002년 71.2, 2003년 73.7, 2004년 76.3, 2005년 78.4, 2006년 80.2, 2007년 82.2, 2008년 86.1, 2009년 88.5, 2010년 91.1, 2011년 94.7, 2012년 96.8, 2013년 98.0, 2014년 99.3년, 2015년 100.0, 2016년 101.0, 2017년 103.0을 반영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 세, 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성 별 (%)	남성	0.84 (0.370)	0.82 (0.386)	0.80 (0.397)	0.80 (0.401)	0.79 (0.406)	0.78 (0.416)	0.77 (0.422)
	여성	0.16 (0.370)	0.18 (0.386)	0.20 (0.397)	0.20 (0.401)	0.21 (0.406)	0.22 (0.416)	0.23 (0.422)
가구주 연령(세)		49.85 (13.979)	50.22 (14.188)	50.82 (14.369)	51.14 (14.536)	51.62 (14.758)	52.78 (15.153)	52.88 (15.317)
교육년수(년)		10.88 (4.398)	10.94 (4.403)	10.98 (4.454)	11.09 (4.447)	11.19 (4.444)	10.86 (4.587)	10.98 (4.561)
거 주 지 역 (%)	수도권 외	0.52 (0.500)	0.51 (0.500)	0.51 (0.500)	0.51 (0.500)	0.50 (0.500)	0.55 (0.498)	0.53 (0.499)
	수도권	0.48 (0.500)	0.49 (0.500)	0.49 (0.500)	0.49 (0.500)	0.50 (0.500)	0.45 (0.498)	0.47 (0.499)
가구원 수 (명)		3.26 (1.299)	3.17 (1.303)	3.10 (1.313)	3.06 (1.303)	2.99 (1.303)	2.87 (1.320)	2.81 (1.314)
표본 수 (가구)		4,142	4,347	4,582	4,625	4,674	5,801	6,02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 별 (%)	남성	0.76 (0.425)	0.77 (0.423)	0.76 (0.427)	0.76 (0.427)	0.76 (0.428)	0.76 (0.429)	0.76 (0.429)
	여성	0.24 (0.425)	0.23 (0.423)	0.24 (0.427)	0.24 (0.427)	0.24 (0.428)	0.24 (0.429)	0.24 (0.429)
가구주 연령(세)		53.30 (15.402)	53.83 (15.348)	54.36 (15.446)	54.84 (15.592)	55.29 (15.635)	55.59 (15.692)	55.88 (15.742)
교육년수(년)		11.11 (4.527)	11.19 (4.498)	11.25 (4.496)	11.30 (4.452)	11.38 (4.421)	11.51 (4.382)	11.63 (4.340)
거 주 지 역 (%)	수도권 외	0.53 (0.499)	0.53 (0.499)	0.54 (0.499)	0.55 (0.498)	0.55 (0.498)	0.54 (0.498)	0.54 (0.499)
	수도권	0.47 (0.499)	0.47 (0.499)	0.46 (0.499)	0.45 (0.498)	0.45 (0.498)	0.46 (0.498)	0.46 (0.499)
가구원 수 (명)		2.79 (1.311)	2.78 (1.311)	2.75 (1.304)	2.72 (1.302)	2.70 (1.302)	2.68 (1.293)	2.67 (1.285)
표본 수 (가구)		6,091	6,157	6,267	6,206	6,391	6,562	6,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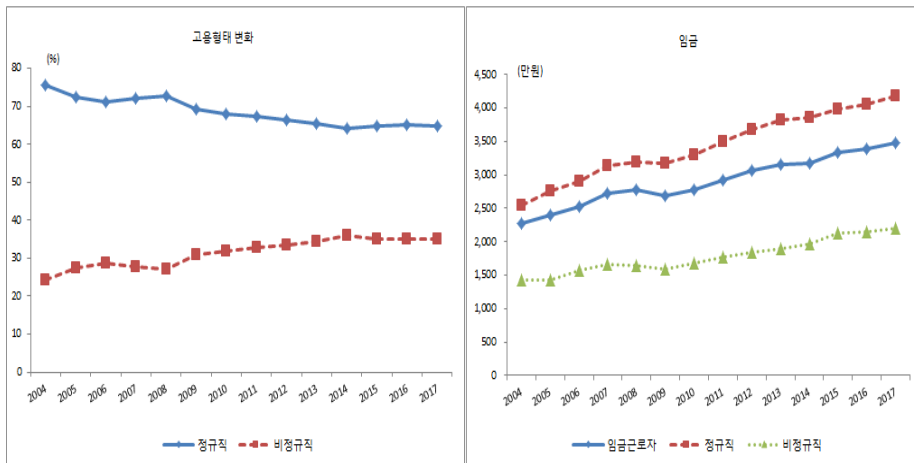
주: ()는 표준편차.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2004~2017년 자료 기준.

비율이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004년 3.26명에서 2017년 2.6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구센서스 결과에 근거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치인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의 하락과 거의 유사한 추세이다.⁸⁾

이 중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고용형태의 변화 및 임금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4~2017년 총 14년의 분석기간 동안 가구주의 고용형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⁹⁾. 고용형태별 임금의 변화는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임금증가보다 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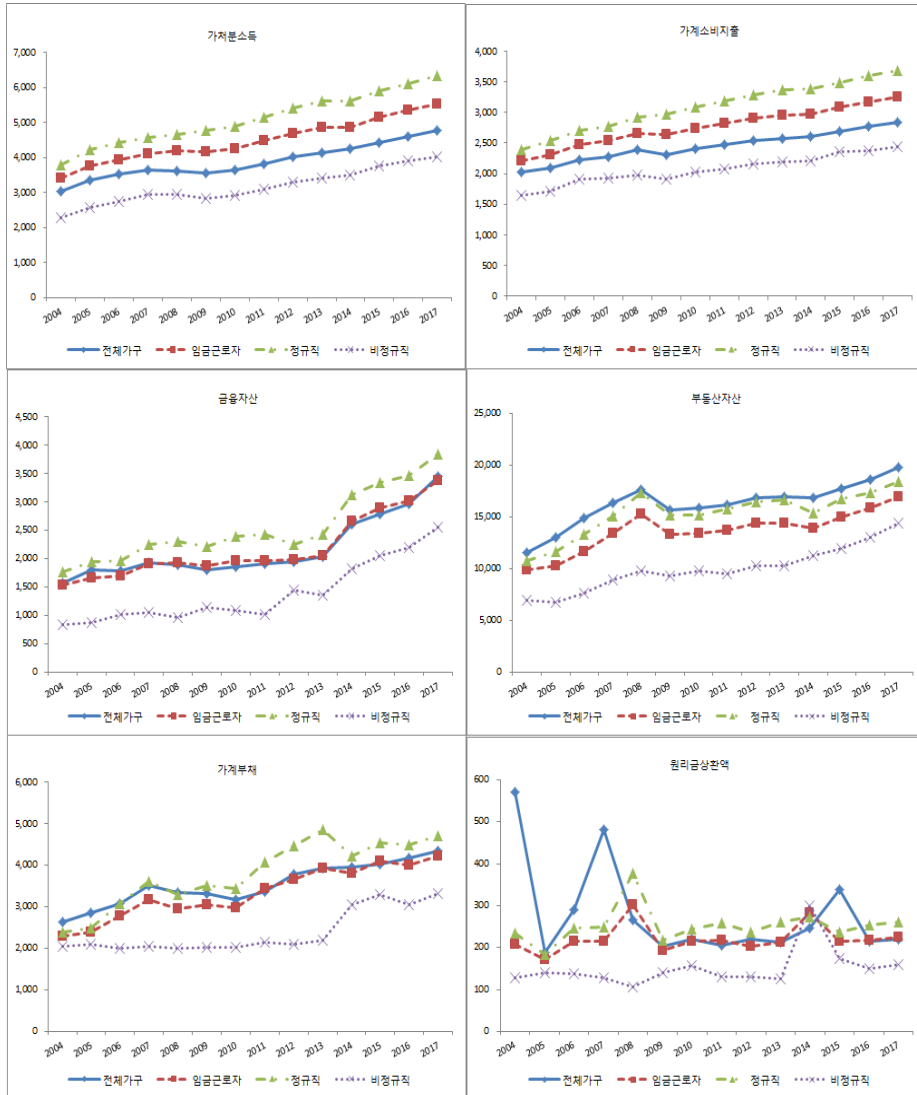
[그림 1] 고용형태의 변화 및 임금 변화의 추이



주: 한국노동패널(KLIPS) 2004~2017년 자료 기준.

- 8) 통계청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1985년 4.16명, 2010년 2.69명, 2015년 2.55명, 2020년 2.42명, 2025년 2.32명, 2030년 2.24명, 2035년 2.17명으로 예측하고 있다(임병인·윤재형(2014) p.593 재인용).
- 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4년 이후 차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32~34% 정도의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분석기간에는 차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범위의 상이함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림 2) 고용형태별로 본 각 변수의 변화 추이



주: 한국노동패널(KLIPS) 2004~2017년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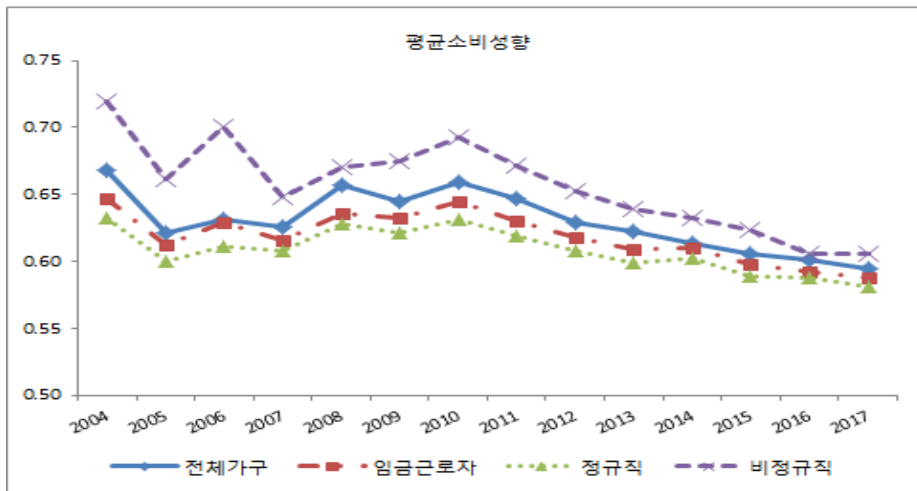
다음은 고용형태별로 가구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자산 및 가계부채, 부채의 원리금상환액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든 가구에서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가구총자산을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자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부채와 부채의 원리금상환액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소비 그리고 자산 변수에서 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정규직 가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¹⁰⁾ 연평균 임금 역시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채와 원리금상환액 역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낮은 수준이지만 2014년 비정규직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때 비정규직의 원리금상환액이 정규직의 원리금상환액 보다 더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그림 2 참조).

다음은 가구소득과 소비를 이용하여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기간 동안 평균소비성향의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평균소비성향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소비성향 감소추세는 정규직에 비해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주: 한국노동패널(KLIPS) 2004~2017년 자료 기준.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004년 65.2%에서 2019년 54.6%까지 하락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IV. 실증분석

1. 고용형태별 소비지출 요인 분해

가. 소비지출 요인별 분해분석 모형¹¹⁾

가계소비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대비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만큼이나, 가계소득 중 얼마만큼 소비에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 역시 가계소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begin{aligned} C_t &= Y_t \times \left(\frac{C_t}{Y_t} \right) \\ &= Y_t \times APC_t \end{aligned} \quad (1)$$

식 (1)에서 C_t 는 t 기의 소비를 나타내며, Y_t 는 t 기의 가처분소득 그리고 $\frac{C_t}{Y_t}$ 는 t 기의 평균소비성향(APC)으로 이 중 가계소득 Y 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원의 특성 변화와 가구 외적인 요인으로 가구원의 취업이나 은퇴 여부, 가구원의 연령 변화와 임금상승률, 경기변동, 최저임금정책, 정부정책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APC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요인은 소득분배 구조, 주거비 부담, 고령화 정도, 실직 및 이직으로 인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가계부채¹²⁾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원·김천구, 2017). 모달리아니

11) 주원·김천구(2017)의 소비지출의 요인별 분해 방법을 참고.

12)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질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주거비용 급증에 대한 불안감 확대, 노후 생활 의료비 급증 및 경제적 불안감 고조, 실직 및 이직으로 인한 미래소득 불안 증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늘거나 미래 경기 불확실성 증가 역시 가계가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임(주원·김천구, 2017: 4).

(F. Modigliani)와 듀젠베리(J. S.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소비는 현재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한 최고 수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득이 줄더라도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은 소득이 줄었다고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즉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는 쉽게 늘어나지만 소득이 줄어들 때는 쉽게 줄지 않는다는 소비형태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가계의 소비지출 부진을 전체 가구(임금근로자, 비경활 등 포함)와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소득변동효과와 소비성향변동효과 중 어떤 요인이 소비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표 3>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해하였다.

<표 3> 소비지출 요인별 분해방법

	소비지출 변동분해
처음 연도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_t × 평균소비성향 _t (A)
소비성향 고정 시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_{t+1} × 평균소비성향 _t (B)
마지막 연도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_{t+1} × 평균소비성향 _{t+1} (C)
분석기간 소비지출변동	(C)-(A)
① 소득변동효과	(B)-(A)
② 평균 소비성향변동효과	(C)-(B)

나. 소비지출 요인별 분해결과

가계의 소비증가율은 2010년 이후 평균 2%의 증가율로 저조하며, 평균 소비성향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의 요인별 분석기간은 2011년을 기점으로 최근 7년(2011~17년)과 그 이전 7년(2004~10년) 기간으로 구분하여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을 소득변동효과와 소비성향변동효과로 분해하여 비교하였다.

가구균등화된 연평균소득과 소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2004~2010년 소득증가율은 4.35%이고 동기간 소비증가율은 3.97%인 반면 2011~2017년 소득증가율은 4.07%로 2004~2010년에 비해 0.28%p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증가율은 2.73%로 1.24%p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소득증가율보다 소비증가율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은 0.82%p 감소한 반면, 소비증가율은 1.76%p가 감소하면서 전체가구에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비증가율 감소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임금근로자 가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증가율은 1.38%p 감소한 반면 소비증가율은 2.15%p가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은 같은 기간 0.84%p 감소한 반면, 소비증가율은 1.79%p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 및 소비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 7년(2004~10년)에 비해 최근 7년(2011~17년)의 소득증가율 둔화보다 소비증가율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가계의 소비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증가율을 소득변동에 의한 효과와 소비성향변동에 의한 효과로 분해하여 어떠한 요인이 소비증가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4〉 가구균등화 소득·소비지출액 및 연평균증가율

(단위: 만 원, %)

	소득·소비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2004		2010		2004~2010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전 체	1,669.4	1,118.2	2,154.9	1,412.2	4.35	3.97
임금근로자	1,899.5	1,215.9	2,486.5	1,583.5	4.59	4.50
정규직	2,086.7	1,306.1	2,794.4	1,737.5	4.99	4.87
비정규직	1,320.1	937.0	1,832.6	1,256.5	5.62	5.01
	2011		2017		2011~2017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전 체	2,275.8	1,464.1	2,890.8	1,720.9	4.07
임금근로자	2,624.7	1,634.7	3,276.6	1,922.3	3.77	2.74
정규직	2,948.0	1,797.4	3,646.2	2,111.4	3.61	2.72
비정규직	1,960.9	1,300.6	2,594.3	1,573.0	4.78	3.22

주: 전체 가구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활, 실업자 등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 7차~21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 중 7차, 13차, 14차, 20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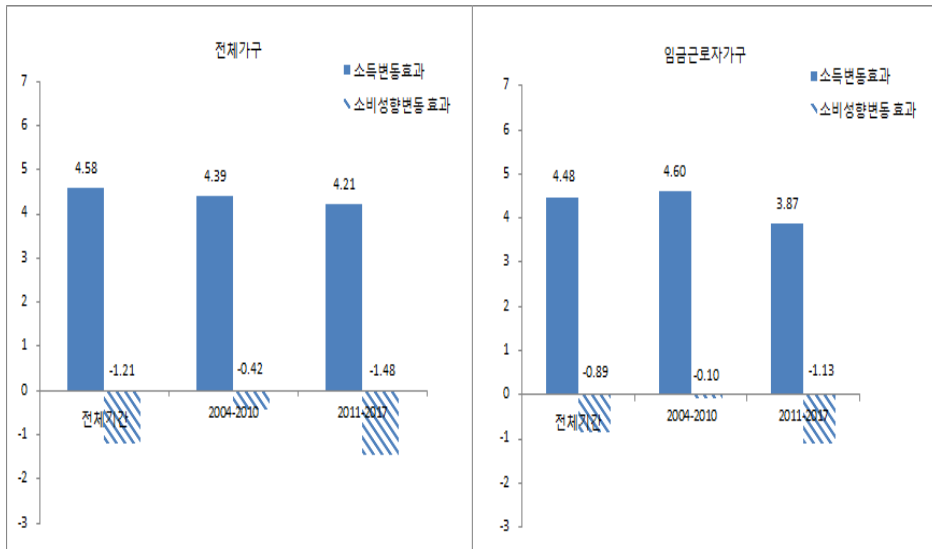
가구균등화 소득과 소비를 이용하여 <표 3>의 분해방법으로 소비증가율을 분해하였다.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증가율을 분해하여 살펴보면, 소득변동에 의한 효과는 4.39%p(2004~10년)에서 4.21%p(2011~17년)로, 소비성향변동에 의한 효과는 -0.42%p(2006~11년)에서 -1.48%p(2011~16년)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10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3.97% 중 소득변화에 따른 효과가 4.39%p, 소비성향변동효과는 -0.42%p인 반면, 2011~2017년의 연평균 소비증가율 2.73% 중 소득변동효과는 4.21%p, 소비성향변동효과는 -1.48%p로 이전에 비해 소득변동에 의한 효과보다 소비성향변동에 의한 기여도가 소비증가율의 부진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되었다.

이 중 임금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비증가율을 분해한 결과, 2004~2010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4.50% 중 소득변동효과는 4.60%p, 소비성향변동효과는 -0.10%p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대부분 소득변동효과에 의해 소비지출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소비성향변동효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2011~201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2.74% 중 소득변동효과는 3.87%p로 감소하였으며, 소비성향변동효과는 -1.13%p로 소비성향 변동에 의한 효과가 크게 하락하면서 소비증가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소비증가율을 분해한 결과, 정규직의 2004~2010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4.87% 중 소득변동효과는 5.00%p, 소비성향변동효과는 -0.13%p이며, 2011~201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2.72% 중 소득변동효과가 3.69%p, 소비성향변동효과는 -0.97%p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2004~2010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5.01% 중 소득변동효과는 5.71%p, 소비성향변동효과는 -0.69%p로 나타났으며, 2011~201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 3.22% 중 소득변동효과는 4.97%p, 소비성향변동효과는 -1.75%p로 크게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증가율을 분해한 결과 과거에 비해 최근 7년 동안 소비증가율 변화는 소득변동에 의한 효과가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소비성향 하락에 의한 변동효과가 크게 확대되면서 소비증가율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소비성향의 하락이 소비지출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전체 가구 및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기여도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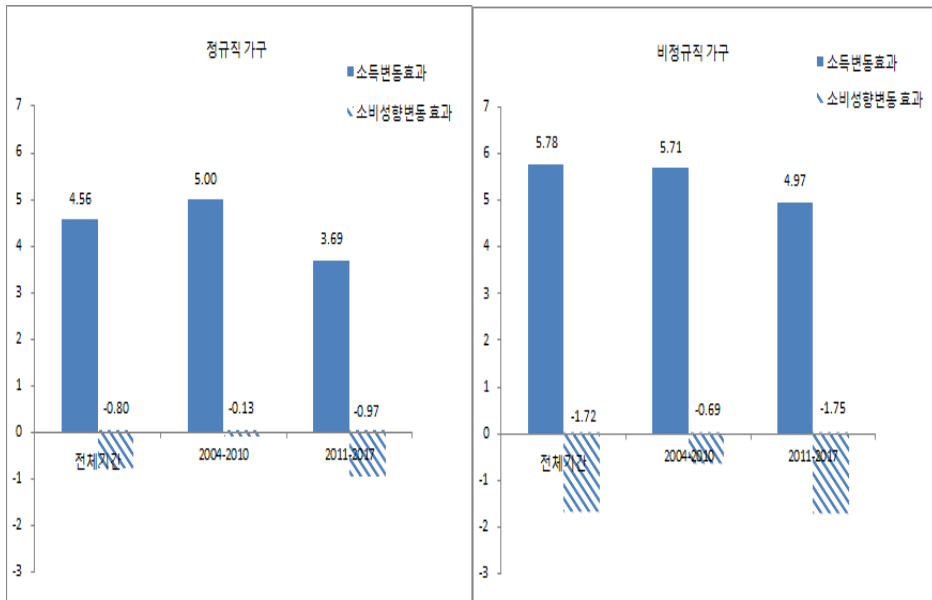
(단위 : %p)



자료: 한국노동패널 7차~21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그림 5)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의 소비지출 기여도 분해

(단위 : %p)



자료: 한국노동패널 7차~21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2. 가구주 고용형태가 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평균소비성향 결정모형을 추정한다. 아래 식 (2)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선형회귀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PC_{it} = \alpha_0 + \beta_1 \ln Y_{it} + \beta_2 \ln A_{it} + \beta_3 \ln D_{it} + \beta_4 \ln R_{it} + \beta_5 d_t + \beta_6 X_{it} + \beta_7 Z_{it} + e_{it} \quad (2)$$

식 (2)의 모형에서 종속변수 APC_{it} 는 i 가계의 t 시점에 평균소비성향, 설명변수 $\ln Y_{it}$ 는 가계소득의 자연대수값, $\ln A_{it}$ 는 가계총자산의 자연대수값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구분하였으며, $\ln D_{it}$ 는 가계부채의 자연대수값, $\ln R_{it}$ 는 원리금상환액의 자연대수값이다. d_t 는 연도더미 변수, X_{it} 는 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력 등 가구주의 특성 변수를 나타내며, Z_{it} 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더미로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나.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2017년으로 총 14년을 사용하였다.

<표 5>에는 2004~2017년의 전체 분석기간 동안에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구주의 성별은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평균소비성향과 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 학력(교육년수),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수 변수는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의 계수값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생애주기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로 낮은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증가로 소비가 증가하지만, 일정 연령을 넘어서게 되면 소득수준이 차츰 낮아지면서 소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분석기간을 2004~2010년은 0, 2011~2017년은 1의 연도 더미변수를 분석한 결과 2004~2010년보다 2011~2017년이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구소득과 자산 등의 설명변수가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득은 음(-)의 값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은 양(+)의 값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 이들 변수 중 가구소득이 음(-)의 값으로 평균소비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증가는 소비성향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실증분석과 유사한 결과(차은영; 1996, 김진웅·노영진; 2017)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면서 자산에 대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계의 예산제약을 결정하는 부채를 통한 소비행위를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입을 통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기보다는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가구와는 다르게 가구소득 변수 대신 가구주의 월평균임금 변수에 12를 곱하여 연평균임금으로 변환 후 분석에 포함시켜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성별과 학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거주지역 및 가구원 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전체 가구와 동일하게 양(+)의 값을 나타냈다. 연령의 경우 전체가구에서는 48.9세 이후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임금근로자 가구에서는 이보다 이른 44.5세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영업 가구나 비경제활동 가구의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높은 평

균소비성향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도더미는 전체 가구와 상이하게 2004~2010년에 비해 2011~2017년이 평균소비성향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더미가 경기변동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추세 변화를 의미하지만 소비와 관련이 있는 관련 변수들, 예를 들어 주거비 부담, 실직과 이직 등의 설명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해 전체 가구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¹³⁾. 하지만 본 연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의 효과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임금 변수는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값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가구의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값을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평균소비성향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 전체 가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계부채 변수는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변수가 전체 가구와 임금근로자 간의 부호가 반대인 것은 각각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전체 가구는 자영업 또는 비경제활동 가구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유동성 제약이 높은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자산의 축적은 자녀의 교육이나 노후의 소득을 위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자산축적이기 때문에 자산수준이 높더라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 수 있기에 소비수준이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가구의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규직 가구에 비해 비정규직 가구가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 가구 중 정규직 가구주의 인구학적 변수들은 임금근로자 전체 가구를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더미 변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음(-)의 추정 계수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평균소비성향이 2004~2010년보다 2011~2017년에 더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음(-)의 추정 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소비

13) 해석에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표 5〉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2004~2017년)

	전체 가구	임금근로자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남성=0, 여성=1)	-0.1226* (0.070)	-0.0058 (0.013)	-0.0250 (0.018)	0.0165 (0.016)
연령	0.1271*** (0.011)	0.0089*** (0.003)	0.0105** (0.004)	0.0016 (0.003)
연령의 제곱	-0.0013*** (0.000)	-0.0001*** (0.000)	-0.0001** (0.000)	-0.0000 (0.000)
학력(교육년수)	0.1473*** (0.010)	-0.0010 (0.002)	-0.0015 (0.002)	0.0001 (0.002)
거주지역 (수도권=1, 수도권 외=0)	0.1651*** (0.063)	0.0227** (0.009)	0.0228** (0.011)	0.0171 (0.013)
가구원수	0.5741*** (0.021)	0.0301*** (0.004)	0.0398*** (0.005)	0.0103** (0.005)
연도더미 (2004~2010년=0, 2011~2017년=1)	0.1923*** (0.031)	-0.0410*** (0.007)	-0.0322*** (0.010)	-0.0651*** (0.010)
ln_가구소득	-3.0826*** (0.025)	-	-	-
ln_임금	-	-0.0686*** (0.007)	-0.0849*** (0.011)	-0.0477*** (0.008)
ln_금융자산	0.0656*** (0.005)	-0.0107*** (0.001)	-0.0094*** (0.002)	-0.0126*** (0.001)
ln_부동산자산	0.0373*** (0.005)	-0.0005 (0.001)	-0.0001 (0.001)	-0.0020 (0.001)
ln_가계부채	0.0111* (0.007)	0.0023 (0.002)	0.0016 (0.002)	0.0032* (0.002)
ln_원리금상환액	0.0125 (0.009)	-0.0055** (0.002)	-0.0051* (0.003)	-0.0051* (0.003)
고용형태 (정규직=0, 비정규직=1)	-	0.0271*** (0.010)	-	-
Constant	18.8924***	1.0526***	1.1086***	1.1848***
Observations	78,503	37,933	25,781	12,152

주: 1) 전체 가구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활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3) * p<0.1, ** p<0.05, **** p<0.01.

4) 소득, 소비, 자산 및 부채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화한 후 자연 대수 변환값.

자료: 한국노동패널 7차~21차 통합자료.

성향이 정규직에 비해 2011~2017년에 더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변수에서는 비정규직의 추정계수 값이 정규직에 비해 작게 나타나면서 임금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가구는 정규직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금융자산 계수가 음(-)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부채 변수는 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 모두 음(-)의 추정계수 값을 보이며 가구의 원리금상환액 증가가 가구의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평균소비성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와 원리금상환액의 음(-)의 효과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국내 소비부진과 더불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원인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7차~21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평균소비성향의 지속적인 하락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1년을 기준으로 이전 7년(2004~2010년)과 최근 7년(2011~2017년)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소비지출을 소득변동효과와 소비성향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어떠한 요인이 소비증가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임금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의 고용형태별로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소비증가율을 소득변동효과와 소비성향변동효과로 분해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가구에서 가계의 소비부진에 소득변동에 의한 효과보다 소비성향변동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정규직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소비성향의 하락이 가계 소

비지출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2004~017년의 분석기간 동안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및 거주지역 변수는 가구 전체와 임금근로자 가구 그리고 임금근로자 가구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구소득 및 임금변수는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값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증가는 소비성향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실증분석과 유사한 결과(차은영; 1996, 김진웅·노영진; 2017)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산 및 부채 변수의 경우 분석기간에 따라 전체가구에서는 자산에 대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면서 평균소비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추정된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와 다르게 평균소비성향에 음(-)의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의 부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금융자산 추정계수가 음(-)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부채 변수는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차입을 통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보다는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는 임금근로자 가구 중 비정규직 가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정규직의 경우 소비의 부족한 부분을 부채의 차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리금상환액의 경우 임금근로자 가구에서 평균소비성향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초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비정규직의 금융자산은 2011년부터 증가하고,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와 원리금 상환액의 음의 효과가 정규직보다 높아 부채상환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넷째,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평균소비성향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임금이 증가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며, 이는 소비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⁴⁾. 분석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이전 기간보다 최근에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평균소비성향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금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가구는 정규직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구소득, 자산, 부채 변수가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중 소득변수가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2004~2010년에 비해 최근에는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반면,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구주의 연령(고령화 정도), 가계부채, 가구주의 고용형태 변수 등이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까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2007년 기간제법¹⁵⁾ 실시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대안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가구의 소득 감소는 가계의 소비여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내수시장에 구조적인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적극적인 고용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근로소득 보존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구주의 고용상태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 가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

1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7)」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6년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金の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평균소비성향이 정규직보다 높은 원인은 비정규직의 기본적인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임.

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순희·안준기(2013). 「비정규직 유형별 교육훈련의 임금과 고용안정성 효과」. 『노동경제논집』 36(1): 63~92.
- 권규호·오지윤(2014).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KDI 경제전망』.
- 권순식(2013).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노동정책연구』 13(2): 31~66.
- 김군수·김희연·신기동·최창욱(2013). 「중고령층 소비문화의 원인과 대책」. 『이슈진단』 98, 경기개발연구원.
- 김석기(2015). 「평균수명 증가가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고령층을 중심으로」. 『KIF 연구보고서』 2015(4).
- 김유선(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 8) 결과」. 『노동사회』 204: 56~94.
- 김진웅·노영진(2017). 「최근 가계 소비침체의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연구」. 『통계연구』 22(3): 41~67.
- 김태홍(2013).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분해」. 『여성연구』 84(1): 31~61.
- 나승호·정천수·임준혁(2013).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BOK경제리뷰』.
- 남재량(2007). 「비정규직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0(2): 1~31.
- 박기백(2017). 「소비성향 변화의 분해」. 『경제학연구』 65(1): 79~102.
- 배성중·이상호(2006). 「소득분배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2006-04: 23~56, 한국은행.
- 변양규(2015). 「민간소비 부진 현황과 시사점」. 『KERI Brief』 15-10. 한국경제

연구원.

안주엽·정성미(2012). 『고용형태별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업종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임병인·윤재형(2014). 「우리나라의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이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27(2): 585~605.

장지연·이병희(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매커니즘과 정책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71~109.

정세은(2017). 「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 정책」. 『사회보장연구』 33(3): 169~192.

주원·김천구(2017). 「소비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 『경제주평』 17(42): 17~42.

차은영(1996). 「저축행동과 유동성 제약: 한국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연구』 40(4).

최규권(2005. 1. 20).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 현상-현황·원인·대책」. 한국은행 보도자료.

최요철·김은영(2007). 「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2007-10: 23~53.

최정수·박소현(2004). 「외환위기 전·후의 소비패턴 변화 및 소비부진 원인 분석」. 『경제이슈 분석자료』, 통계청.

최효미(201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상태의존성」. 『노동정책연구』 14(1): 1~33.

통계청(2019. 10. 2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Forster, M.(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ch4. Non-Standard work, job polarisation and inequality), pp.135~208, Paris: OECD Publishing.

Friedman, A. Milton(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ll, R.(1978). “Stochastic Implications of the Life-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6) : 971~987.

Modigliani, F. and R. H. Brumberg(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enneth 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Analysis on the Effects of Employment Types of Householders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Jeong Juyeon · Kim Jaeho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mployment types of householders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by using the 7th-21st data of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for the causes of sluggish consumption at home and the drop i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First, dividing the period into the previous seven years(2004~2010) and the recent seven years(2011~2017) on the basis of 2011 that started showing the continuous drop i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by dividing them into the income fluctuation effect and consumption propensity fluctuation effect. In the results of estimation, every household showed the greater effects of consumption propensity fluctuation than the effects of income fluctuation on the sluggish household consumption. Especially, in case of households with nonregular workers, the drop in the propensity to consumption continu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as working as a huge constraint factor on the household consumption.

In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effects of employment types of householders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first,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householders showed the different effects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in the whole households and the households with wage workers. Second, the household income & wage variable had huge negative(-) effects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The asset & debt variable showed

the negative(-) effects on the asset as the estimated coefficient was the positive(+) value in the whole households while the households with wage workers showed such different estimated results depending on the period of analysis. Especially, the financial asset estimated coefficient of nonregular workers showed the greater negative(-) value than the regular workers, which had greater effects on the drop i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Third, the household debt showed the positive(+) relation with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Especially, the nonregular workers of wage workers showed the great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showed that the insufficient part of consumption was covered by borrowing a debt. Fourth, The dummy variable of employment types of householders showed the positive(+) value. In case when the wage increased, compared to the regular workers, the nonregular workers was more highly possible to increase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and also to be connected to the increase of consumption. Also, the employment types of householders had bigger effects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in recent years than the past.

Keywords : household consumption,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wage workers, employment types